



지난달말 폐막한 제77차 ILO총회에서는 남녀 노동자들의 야간근무와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다. ILO총회가 열리고 있는 팔레 드 나시옹(국립궁) 회의실 모습.

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관해 ILO 차원에서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기도 해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년간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공해산업까지도 적극 유치해 왔던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길을 걸었다.

ILO는 총회 마지막날인 지난 달 27일 전직중의 남녀 야간근무 종사자들의 건강 및 복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새로운 협약과 위험한 화학물질의 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채택했다.

야간근무에 관한 협약은 임신 부나 젊은 산모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포함, 야간 교대근무자들에게 대한 보상책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임금하락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총회는 여성의 야간근무를 금지한 지난 48년의 협약내용을 완화·수정했는데 이는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가 오히려 여성

동서화해 분위기 속 나라간 협력문제 집중 남녀 야간근무자 건강·복지대책 촉구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제77차 총회가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돼 2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독일의 사실상 통일과 동서진영간의 이념대립 약화 등으로 압축되는 국제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형태의 국가·지역간 협력을 모색, 노동자의 지위향상, 복지증진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세계 1백50개 회원국 가운데 1백40여개국이 참석한 이번 총회의 업저버인 우리나라는 최영철 노동부장관, 박종근 한국노총 위원장, 황정현 한국경총 부회장 등 노·사·정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77차 ILO총회의 이모저모와 한국의 가입전망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해마다 ILO총회가 열리는 팔레 드 나시옹 국제회의장은 2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회의장 정면에는 의장단석과 연단이 있고 그 뒤로 각국 대표들의 좌석이 줄지어 있다.

남북한은 모두 정식 회원국이 아닌 업저버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 맨 뒤에서 두번째줄에 좌석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쪽 좌석 사이에는 중앙으로 통하는 큰 통로가 가로질러 있어 이곳에서도 남북한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북쪽 대표는 북한 제네바 대표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로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교대로 한명씩 나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어서 노사정 대표 이외에도 고문자격으로 참석한 사람까지 합쳐 8~9명이 참석한 한국쪽과 대조를 이루었다.

제네바 한국대표부 손우현 공보관은 "이곳 제네바에는 국제연합(유엔) 유럽사무국과 1백20여개의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유엔

전문기구를 비롯한 주요기구에는 남북한 모두 정회원 또는 업저버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회의장에서 남북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흔히 볼수있다"고 말했다.

최영철 노동부장관과 함께 정부쪽 대표로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상옥 주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고르바초프의 소련 개방정책과 동서독의 통일 움직임 등 동서진영간 화해분위기가 이곳 회의장까지 영향을 끼쳐 전반적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ILO총회에서는 ILO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야간근로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의 안전보건 △호텔·레스토랑 등 작업장에서 근로조건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등에 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달 6일의 개막식에 이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미첼 한센 벨기에 사무총장은 '환경과 근로의 세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악화일로에 있는 환



업저버로 ILO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총회에 노·사·정 대표 주 제네바 대표부대사, 최영철 노동부장관, 박종근 한국노총 위원

경문제가 고용이나 근로환경, 나아가 노동의 존엄성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의 노사정 3자가 환경정책의 결정과 실행과정에 공동참여하여 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영철 노동부장관도 총회개막 이틀째인 7일 기조연설에서 "ILO는 유엔과 협조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 근로조건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또 "선진 국가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

의 취업기회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ILO는 이번 총회에서 또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을 분류, 특정제품의 사용금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한편 호텔 및 레스토랑업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을 승인, 내년 총회에서 이에 관한 국제협정의 채택여부를 공식논의하기로 했다.

ILO와 관련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가입문제이다. 지난 82년 ILO 집행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식 업저버가 된 우리나라는 유엔 산하기구중 유일하게 ILO에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84년부터 우리나라와 같이 업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ILO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산하단체인 ILO에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매년 6월 열리는 연차총회에서 회원국의 정부대표 3분의2 찬성을 포함한 전체 참석대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82년 이후 해마다 ILO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왔고 지난해에는 간접적으로 ILO 가입을 타진해 보았으나 가망이 없다고 판단, 보류했다.

북한은 '2개의 한국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남한의 단독가입 또는 남북한 동시가입을 모두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남한이 독자적인 외교 역량으로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확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북한쪽이 '한국경찰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

논의 채택



9명이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이상황정현 한국경총 부회장.

는 사진' 등을 실은 신문을 회원국에 돌리며 은근히 방해공작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부는 올해가 ILO 가입에 가장 유리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 외무부와 노동부·한국노총·한국경총 등 노사정 합동의 'ILO 가입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ILO 가입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으나 올해 연차회의를 앞두고 가입신청서를 내지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ILO 가입신청을 냈을 경우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표 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가입에 필요한 표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I

LO총회를 통한 직접 가입방식에서 유엔가입을 통한 자동가입 방식으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한국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ILO 가입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ILO에 가입할 경우 국내의 노동조건을 ILO규정의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포기한 것이 아니냐"

며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은 ILO규정과 비교할 때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3권 보장 △실업보험제도 실시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해 정부가 오히려 ILO가입을 꺼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ILO 가입문제에 대해 "우리의 노동현실은 ILO협약 및 권고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ILO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밝히고 "ILO 가입을 기피하거나 ILO 미가입을 이유로 우리나라 근로조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ILO 가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아직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재왕국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근로조건 개선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